

‘복지, 공평만이 최선일까’

“재수 없으려면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무엇을 해도 성과를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만으로 인간사가 공평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했던 것이 가장 먼저 회상됩니다. 원래는 국민 70%에게만 지급하려다 '공평'을 이유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의 자발적 기부를 기대했으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령 후 사용하지 않아 최종 기부금로 처리된 자금은 2,8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했다는 KTV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계 지장이 없던 고위 공무원들도 지원금을 받아 생색내기에 활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공평한 복지'가 오히려 공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씻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피서인지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도 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단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맞춤형 복지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요즘 지급 신청을 접수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총 25만원 ~ 55만원을 차등 지급하여 소득 지역 연령층 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지역 노인회장께서는 "노인들도 경로당을 찾는 분, 노인복지관을 찾는 분, 경로당조차 나오기 힘든 분으로 나뉜다"라며 노후자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편입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 이들보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균등한 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춘천미래동행재단이 벽오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오지택배사업을 진행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하는 활동은 '받는 복지'를 사회로 환원하는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먼저 배려하려는 의지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공평 복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 춘천미래동행재단 노후동행사업단 (2025. 8. 1.)